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상정...대법관 100명 증원법도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회 "사법탄압" 대선 전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

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합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수 표결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이 후보의 파

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행위' 삭제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민주 "정치사법화 독소 조항"...국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

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은 "尹 알박기 인사"

민주당, 강하게 비판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도 소위 '윤석열 사람'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출근한 김 신임 사장은 윤석열 정부 농정 라인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인사는 단순한 인사남용을 넘어 국민 주권

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선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권한대행이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은밀히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윤석열식 보은성 알박기 인사를 허용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행이 강행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감사, 직무정지 처분 신청, 수사기관 고발 등 사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인중 신임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1994년 행정고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지 날인, 법은 '직접' 규칙은 '인쇄'...선관위 "실무적 어려움"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의혹 없게 규칙을 법률로 전환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용지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지금의 관례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 이는 법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실무적으로는 투

표판이 직접 날인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관위의 규칙과 현행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제도를 제정할 당시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본투표 절차와 사전투표 절차가 다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규칙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규칙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尹 자진탈당' 확산... "강제 조치도 필요"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표심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당과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지지층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정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라며 여지를 둔 바 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당을)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받을 때 떠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진 탈당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